

3.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김 국 신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1월 20일 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취임식을 지켜보기 위해 200여 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은 84%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내각은 바이든(Joe Biden) 부통령과 힐러리(Hillary Clinton) 국무장관, 게이츠(Robert Gates) 국방장관 등 경륜이 뛰어난 인물들로 구성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2~3일 내에 예비각료들에 대한 상원 본회의의 인준절차가 마무리되면 내각의 진용을 갖추게 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임스 존스(James Jones) 전 NATO 사령관이 임명된다. 한편, 힐러리 국무장관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명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다. 북핵 협상을 이끌 대북특사로써는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초당적으로 구성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의 기본 틀은 유지·강화될 것이다. 향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과 실천계획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간에 기존에 합의한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은 오바마 행정부하에서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유세에서 무역자유화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철강·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차기 행정부 정책구상을 제시한 오바마-바이든 플랜(The Obama-Biden Plan)은 경제·통상정책 관련,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성향을 보이며 FTA의 전제조건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상대국 시장접근 확대, 노동·환경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힐러리는 13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국무장관직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국이 자동차, 비관세 장벽 조항에 재협상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의 전면적인 재협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동차 노조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자동차 시장 개방확대 등을 위한 추가협상을 제외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이야말로 테러와의 전쟁 최전선이라고 주장하며 집권하면 미군 병력을 증강하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들을 격퇴시키겠다고 주

장하였다. 이라크에서의 명예로운 미군 철수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 끌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우방국과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이라크 재건 및 아프가니스탄 치안안정에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특히 경찰 요원 및 군대 파병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아프가 니스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동맹국으로서의 부담감, 국내적 여론, 중동국가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핵확산 방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 행정 부는 한국에 대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PSI 참여 문제를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중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외교를 구사하고 6자회담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였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데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 였다. 오바마 당선을 기대하고 있던 북한은 대선 직후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리근 국장은 11월 6~7일 뉴욕에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주최한 한반도 전문가 회의 참 석을 계기로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한편, 12월 8~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핵신고서 검증 문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시료 채취(샘플링)를 검증의정서에 명문화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시료 채취는 3단계에 가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하였다. 차기 오바마 행정부와 더 좋은 조건으 로 협상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북한은 핵검증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지연시킨 것이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 인수팀은 북한과 ‘강인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힐러리 국무장관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어느 누구와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우 라늄 농축, 핵 확산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한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북·미 협상에서 핵검증 문제 등에 관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향후 북한이 핵 검증에 협조적으로 나오면 북·미관계는 국교정상화를 향해 급진전될 것이 다. 그러나 북한이 핵검증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인권압 박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압력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 여하튼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대북정책에 관한 공조체제를 긴밀 히 유지해 나갈 것이다.

